



# 아·태 에너지 협력구상

동아시아연구원(EAI)  
<중국의 미래 성장과 아태 신문명 건축> 연구팀



**EAI**  
동 아 시 아 연 구 원

# 아·태 에너지 협력 구상: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아·태 지역의 미래

2020. 6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의 미래 성장과 아태 신문명 건축〉 연구팀 \*

---

\* 본 스페셜리포트는 권원순(한국외대), 김성진(한양대), 김연규(한양대),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배영자(건국대), 손열(EAI, 연세대), 신범식(서울대), 안세현(서울시립대), 오승희(EAI), 이동률(EAI, 동덕여대), 이숙종(EAI, 성균관대), 이승주(EAI, 중앙대), 이왕휘(아주대), 이재승(고려대), 전재성(EAI, 서울대), 하영선(EAI) 교수가 참가하였으며 한샘DBEW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 I. 서론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다층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협력 가능성을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시기적으로는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넘어가는 2020-2035년 구간에 주목하여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미중 갈등의 양상과 아·태 지역에서의 협력의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문제 의식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지역에서 에너지 수급 위기가 발생할 것인가? 2)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은 무역 전쟁을 넘어 에너지 분야에서 갈등과 충돌로 이어질 것인가? 3) 상호 윈-윈 협력이 가능한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미중 관계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4) 에너지 갈등이 초래할 부정적 파급효과를 제어하고 협력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유인은 무엇인가?

이상의 질문에 대해 본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력 성장과 함께 에너지 소비가 크게 확대될 경우 에너지 수급의 취약성을 맞을 수 있으나, 미국의 셰일 혁명 및 비전통 자원 개발과 중국의 ‘에너지 혁명’ 전략 등으로 2050년까지 세계는 에너지 공급 과잉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에너지는 군사, 영토, 무역문제 등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공급부족이 아닌 정치적으로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 미중 에너지 분야의 갈등과 충돌은 에너지 부문의 자체 수급논리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선제적 전략에 좌우될 것이다.

미중 간 무역의존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2018년 무역전쟁 이후 가속화되어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미중 무역 관계는 장기적으로 갈등과 조정 국면을 거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양국 간 에너지 무역의 확대와 협력을 촉진할 만한 동력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부문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은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원유 수송로 압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미중 간 패권 장악을 위한 양국의 충돌과 부정적 파급효과는 대단히 크고 광범위하지만, 역설적으로 이해상관자들의 협력 촉진 행동의 유인이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2035년경까지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세계질서는 미국 패권의 정당성이 약화되는 탈집중화(deconcentration) 단계가 진행될 것이다. 현재의 트럼프 정권과 시진핑 정부가 지구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탈트럼프, 탈시진핑 시대를 대비하는 미중 관계의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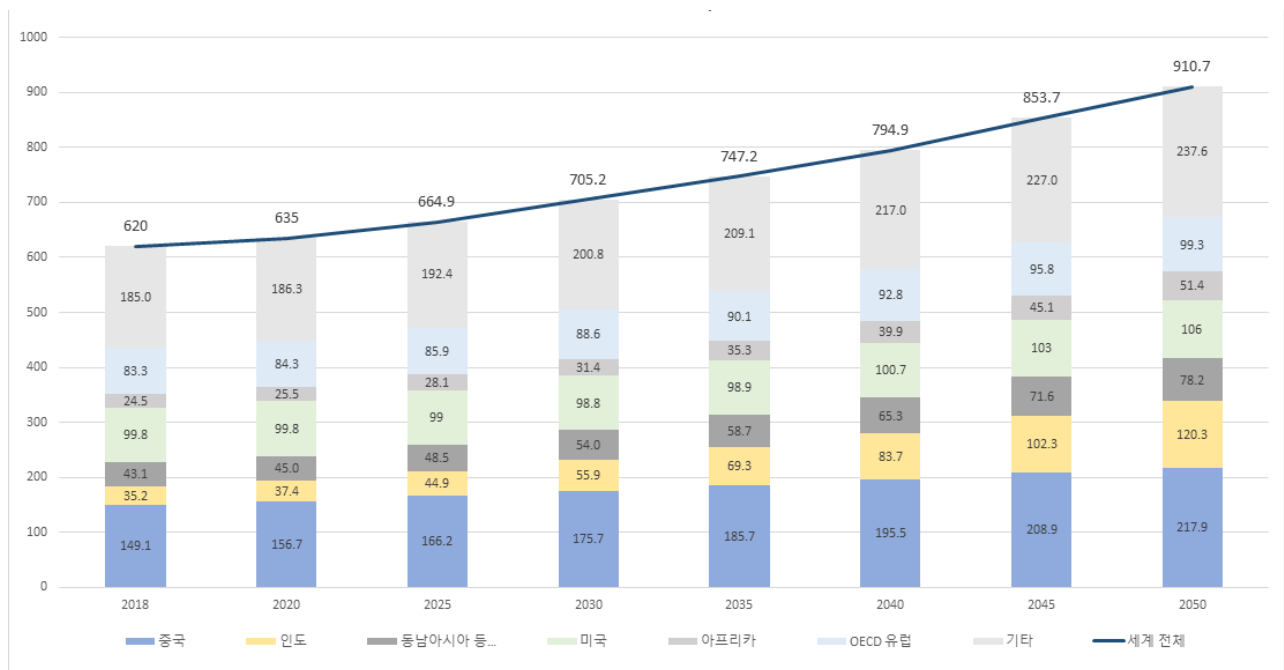
미중 협력은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적극적 비판과 참여가 요구된다. 경쟁성이 약하고 상호 이익이 중요한 분야,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초기 노력의 발판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태 에너지 협력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유인을 모색하기 위해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국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 II. 에너지 수급 전망과 쟁점

### 1. 세계 에너지 수급(2019-2050)

2019년부터 2050년에 이르는 세계 에너지 수급은 공급 초과 상태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은 향후 2050년까지의 세계 에너지 소비가 약 50%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비-OECD 국가가 에너지 소비를 견인할 것이며, 이 중에서도 핵심 플레이어는 중국과 인도일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1). 생산 측면에서는 미국의 생산량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이며 OPEC과 러시아의 상대적 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 기준 미국의 셰일유(shale oil)는 세계 석유 생산량 증가분의 85%, 셰일가스는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분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아태 지역에서 늘어나는 수요는 북미, 중동, 중남미에서 공급되어 장기적으로 석유의 초과 공급은 지속될 것이다. 한편 재생에너지 비중은 연 3% 증가하여 2050년에는 최대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전 세계 에너지 소비 전망 (1000조 Bt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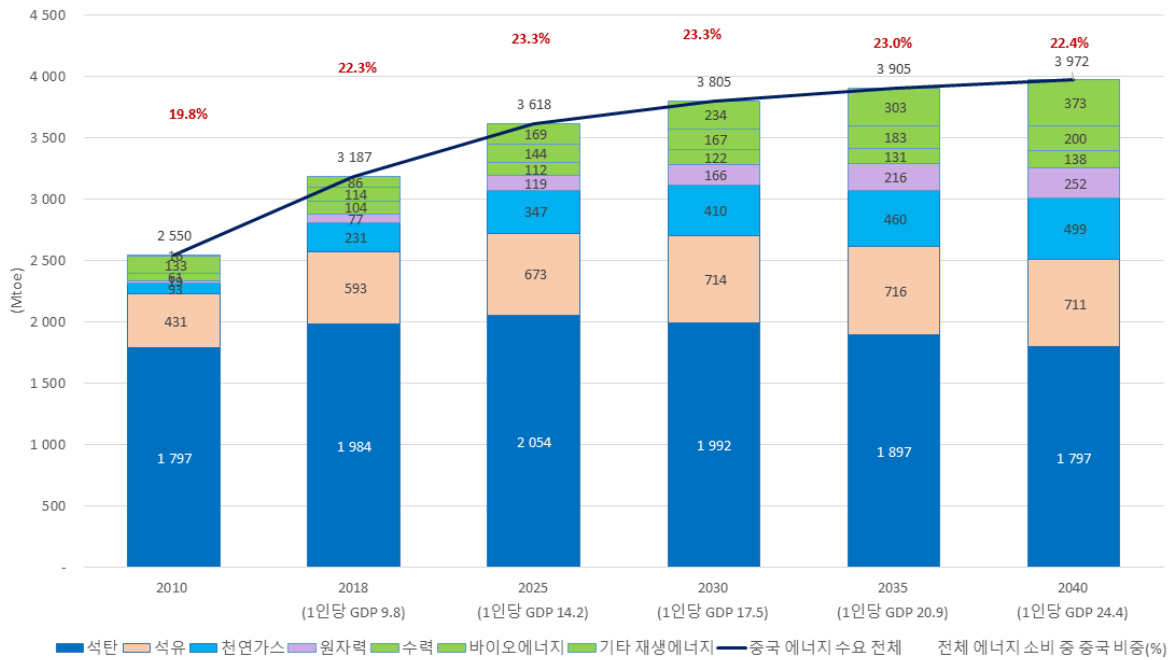
\*출처: EIA (2019)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연구원(EAI) 작성

### 2.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급 변화

중국의 경제 성장이 1인당 GDP 1만 달러에서 1.5만 달러에 이르는 구간인 2020-2030년을 살펴보면, 해당 구간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크게 확대되어 세계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 23.3%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 참고). 한국이 과거 1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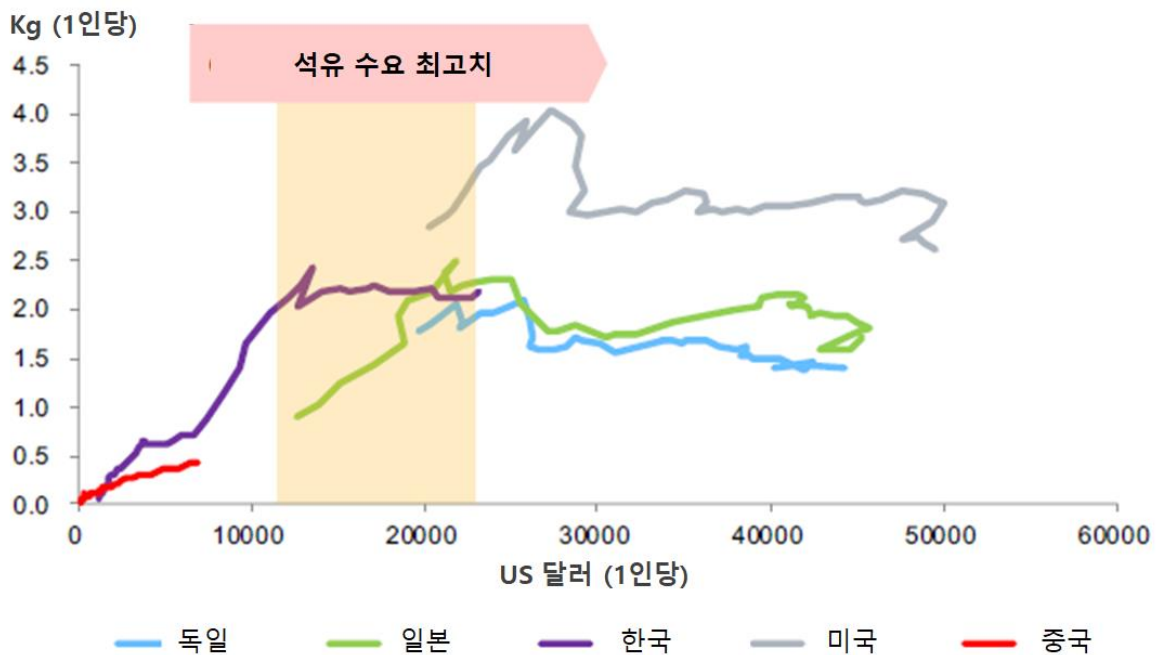
GDP가 1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증가하는 구간에서 석유 소비 증가율이 47.68%에 달했던 사례를 적용해본다면, 중국의 에너지 증가율은 기존 전망치를 상회하여 수급의 취약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 참고).

〈그림 2〉 세계 에너지 소비 중 중국 비중(2010-2040, Mt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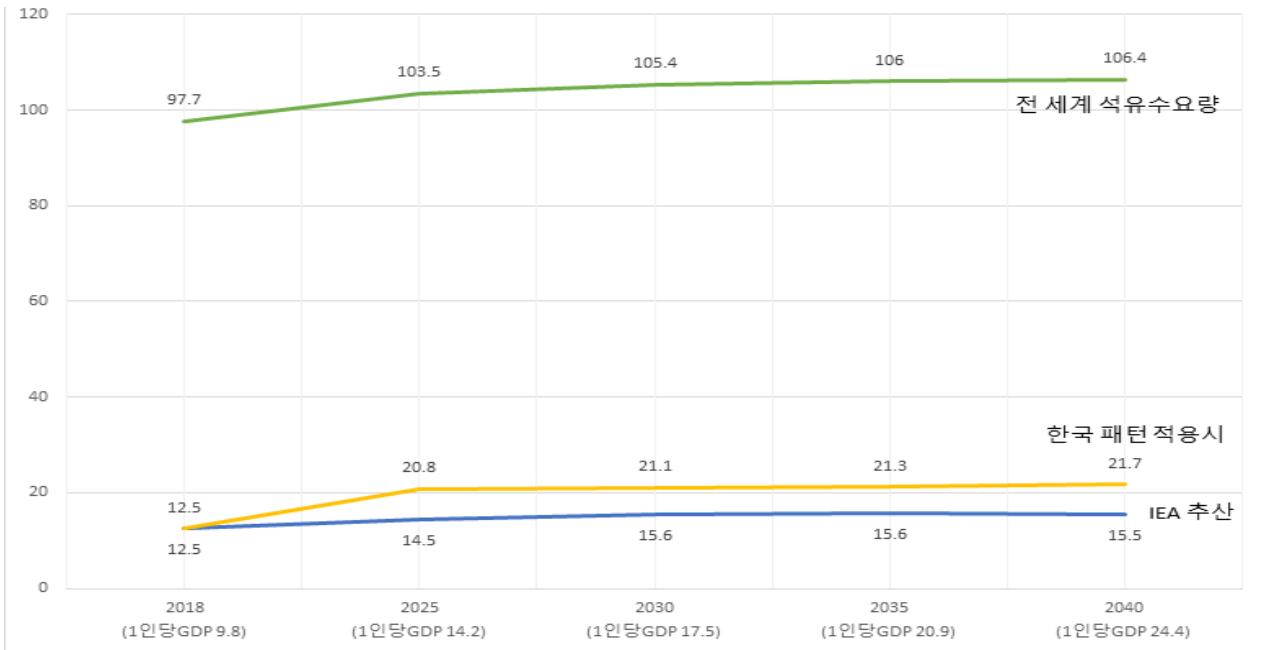


\* 출처: EIA (2019)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연구원(EAI) 작성

〈그림 3〉 중국 1인당 GDP 변화에 따른 석유 수요 예상(M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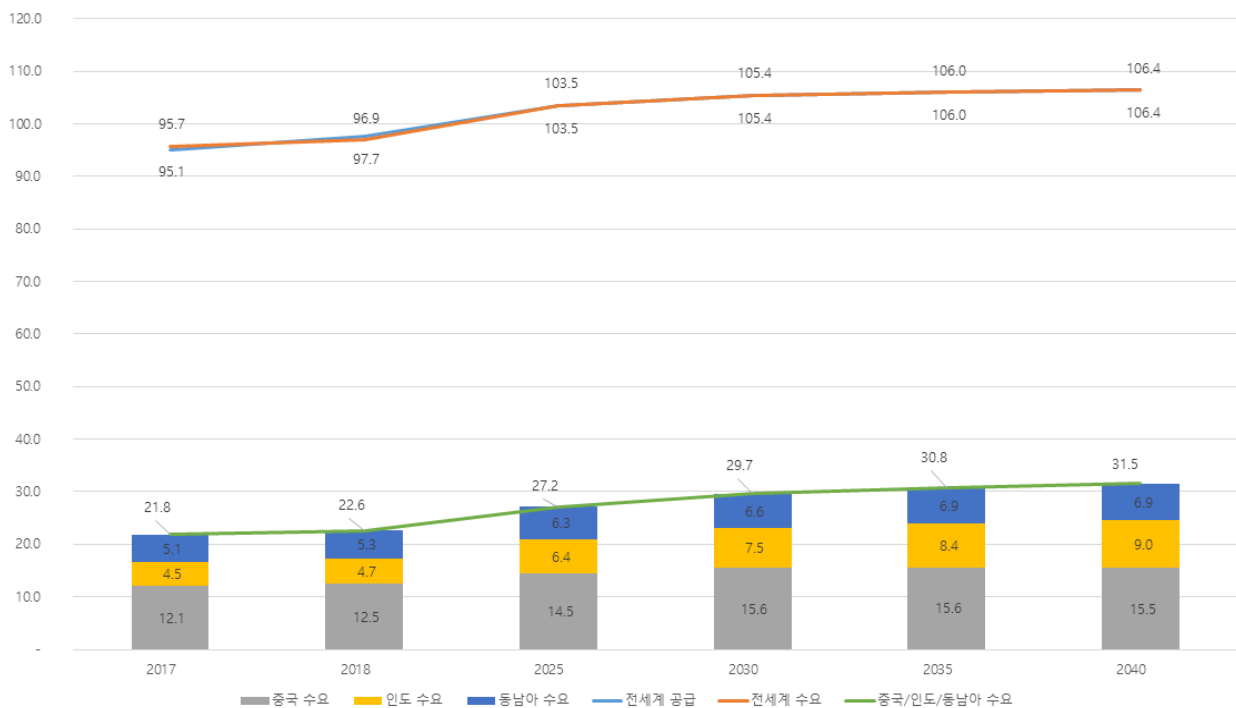


\* 출처: SINOPEC (2019) 참조 동아시아연구원(EAI)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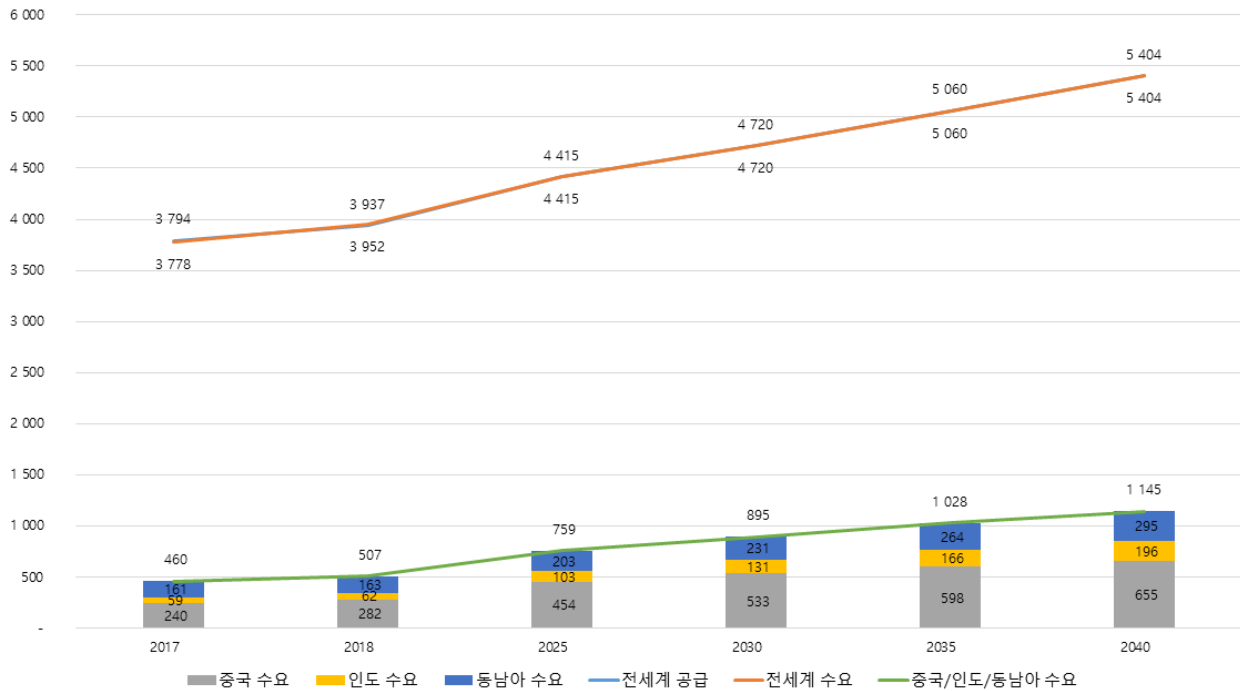
\* 중국 1인당 GDP 추이는 IEA (2019) 내 GDP (\$2018 billion, MER)/Population으로 계산  
 \*\* 출처: IEA (2019)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연구원(EAI) 작성

〈그림 4〉 세계 석유 수급 추이(전 세계 및 중국/인도/동남아시아)



\* 출처: IEA (2019)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연구원(EAI) 작성

〈그림 5〉 세계 가스 수급 추이 (전 세계 및 중국/인도/동남아시아, 단위:bcm)



\* 출처: IEA (2019)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연구원(EAI) 작성

중국 에너지원의 핵심인 석유와 천연가스의 경우 2025년경을 기점으로 수급의 취약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석유 수요는 2018년 12.5Mb/d에서 2040년 15.5Mb/d로 증가, 천연가스 수요는 2018년 282bcm에서 2040년 655bcm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4 참고). 그러나 셰일혁명과 비전통자원의 개발 붐 등으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과잉이 최소 2030년까지 구매자 중심의 시장을 유지시킬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가스 시장의 유연화와 공급의 안정이 예상된다(그림 5 참고). 또한 중국 국내 천연가스전 개발, 파이프라인 확대, LNG 수입 증대 등으로 인해 2030년경 연간 약 3.5 tcf(100만 bcm)가량의 중국 내 대규모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 3. 중국의 에너지 안보 불안

중국은 경제성장과 도시화,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2008년 이래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 자리를 유지해왔다.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8%에서 2018년 22%로 상승하였다. 화석연료에 힘입어 수십년 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한 시진핑 정부는 2014년 6월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혁명”을 요구했다.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혁명 전략 2016-2030년>에 따르면, 시진핑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의 향상, 에너지 소비구조의 최적화, 화석에너지 억제, 청정에너지 개발, 전력시스템 향상, 에너지 기술혁명의 진전 등을 실현하는 ‘에너지 혁명’ 전략을 내세우며 2020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량을 50억 tce로 줄일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2015~2018년 기간 중국의 에너지 총 소비량은 오히려 3억 4000만 tce가 증가하였고, 석탄 외의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19%)와 천연가스(7%)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위해 철강, 시멘트, 화력발전, 석탄화학산업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을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중국이 에너지 혁신 역량 강화 및 기술 격차 축소, 거버넌스 향상으로 에너지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면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에너지 수급 환경은 2030년대 이후에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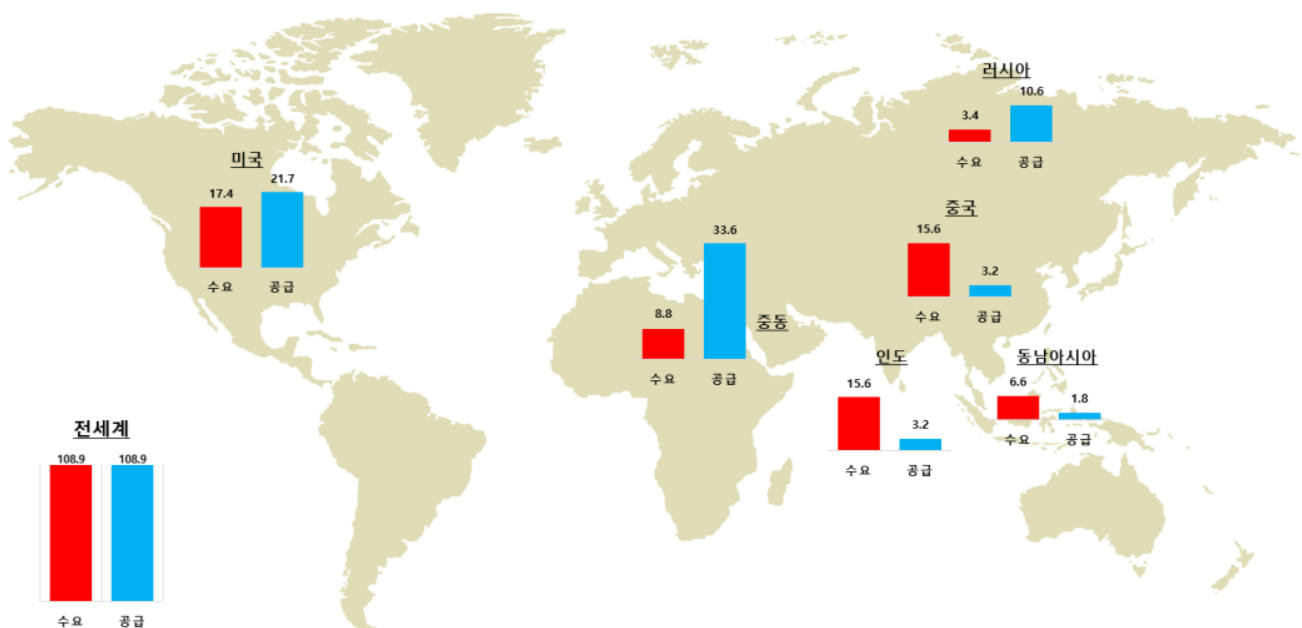
#### 4. 지역별 에너지 수급 전망, 2030

향후 지역별 에너지 수급 전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석유 수급과 관련하여 중국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 인구증가,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진전으로 석유 수요량이 점차 증가하는 지역과 경합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중동의 공급량이 일정하고, 러시아의 공급초과분이 감소하는 가운데,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를 충당하는 국가는 미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중국은 공급 초과분의 미국으로부터 조달이 불가피할 것이다(그림 6 참고).

가스 수급에서도 중국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도의 수요가 증가하고 동남아가 공급 초과에서 2030년부터 수요 초과로 전환되어 아태 지역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이 수입해 온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 중동의 경우 공급 초과 상태이지만 향후 중국의 수요 초과를 감당할 수는 없다. 공급 초과인 미국과 호주 그리고 러시아 중 중국이 급증하는 가스 수요를 어느 지역에서 수급할 것인지가 관건이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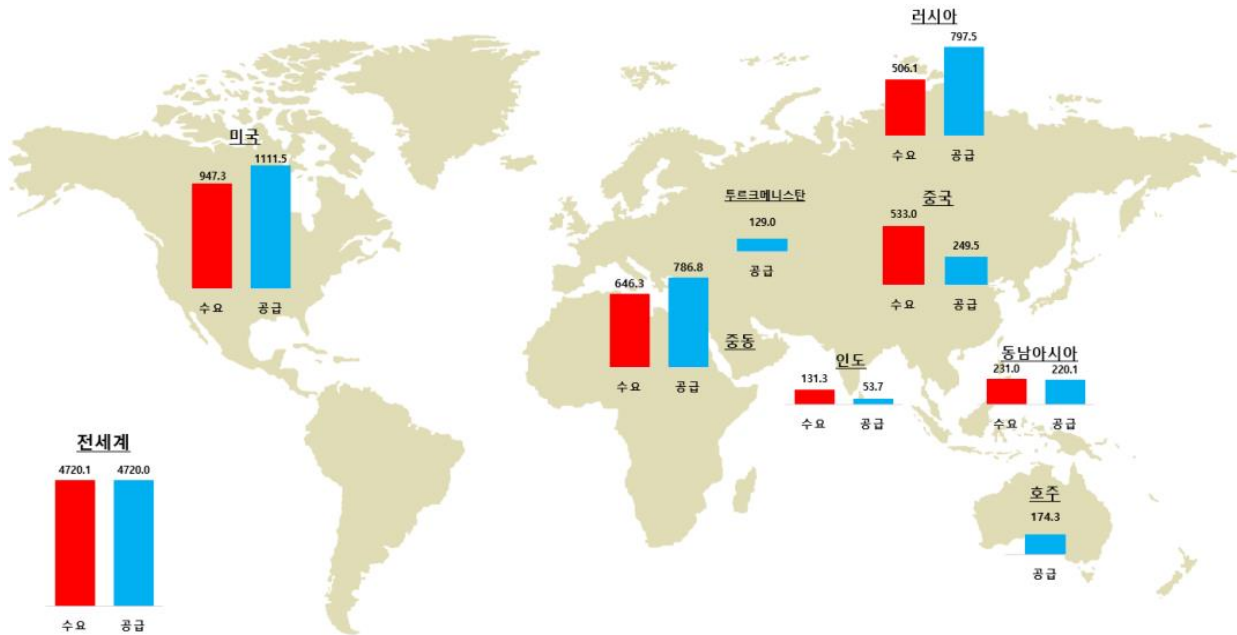
〈그림 6〉 석유 및 가스 수급 전망(2030)

지역별 석유 공급/수요 (2030, 단위: mb/d)





## 지역별 천연가스 공급/수요(2030, 단위: bcm)



\* 출처: IEA (2019)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연구원(EAI) 작성

논의를 종합해 보면 공급 부문에서 가장 변수가 되는 사안은 자원의 고갈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한 수급 차단과 유가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 환경 문제로 인한 투자 회피 등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미래 에너지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에너지원의 양적 확보가 아니라, 공급처와 수송로의 다변화로 대표되는 ‘에너지 안보’라고 볼 수 있다.

### III. 미중 간 전략 경쟁과 미중 에너지 협력과 갈등

미중 관계는 2017년 이후 전략 경쟁기에 들어섰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선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표 1 참고).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본격적인 패권 도전의 의도를 드러낸 바 있으나 국력의 한계를 인식하여 현재의 미중 경쟁을 패권 경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미중은 양국의 사활적 이익, 핵심 이익의 충돌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서로를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이 선제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좌절시키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중국을 지역 강대국으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지역 패권국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기초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대중 공세는 급작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점차 미국 내에서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대 미중 GDP의 역전, 2050년을 향한 중국의 지구적 패권 전략 속에서 미중 간 교란 및 충돌 요인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미중 관계의 역사적 변화

	미국	중국
전반적 협력기 (1991-2000)	냉전 종식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점진적 대중 관여(engagement)전략, 미국의 개입과 확대 대전략 속 중국의 경제발전 촉진 전략, 중국의 WTO 가입 독려, 3불 전략(▶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대만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 견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완화, 국내 정치 안정 도모,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미국과의 전반적 협력, 도광양회 전략, 1995년 대만 사태 이후 장쩌민 주석의 미국과 관계 회복 및 전략적 협력 시도
전략적 경쟁 초기 (2001-2008)	미국의 단극 체제 하 우세(primacy) 전략 추진,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 전략, 부시 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 그러나 테러,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 협력	미국의 대중 강경 정책에 따른 관계 악화 속 2001년 정찰기 충돌 사건 발생, 전반적으로는 대미 수세 외교, 9.11 테러 등 협력 요인 등장으로 중국의 대미 선택적 협력 정책
패권 경쟁 출현기 (2009-2012)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난관 속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 전략적 재보증(strategic reassurance), 전략적 동반자 관계 복원을 제시, 그러나 전반적으로 현상유지	후진타오 주석은 미국 경제위기 이후 지구적 거버넌스에서 미국에 대한 도전, IMF 내 영향력 강화, 위안화의 기축통화 사용 모색, 환경 문제 등 주요 문제에서 주도권 주장, 대미 갈등 속 주도권 확보 외교
현실 관계 복원기 (2013-2016)	경제위기 전반적 회복 이후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Asian rebalancing)전략, 중국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이중 전략, 시진핑 주석과 신형대국관계 설정	2011년 1월 오바마-후진타오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대미 협력 외교 복원, 2013년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중국의 국력 한계에 대한 현실적 인식, 중장기 패권도전을 인식한 신형대국관계 주장
전략 경쟁 심화기 (2017-현재)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대중 본격 견제 전략, 무역, 기술 분야 압박으로부터 경제, 정치, 사회에 걸친 전방위 압박 전략	미국의 거센 무역 압박에 대한 선택적 순응, 단기적 무역 조정에 응하면서 전반적인 국력 강화 전략, 도광양회에서 분발유위로 전략 변화

향후 세계질서는 미국 패권의 정당성이 약화되는 탈집중화(deconcentration) 단계가 진행될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미래 미국의 패권 전략과 대중 전략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전략은 대체로 세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표 2 참고).

미국 내 대중 전략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 중심 또는 과거 중심으로 미래 리더십의 요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며, 트럼프 이후의 시대를 위해 제시되어야 할 대안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미래는 일개, 혹은 소수 패권국만으로 이끌기는 어려운 세력 확산(power diffusion)의 시대가 될 것이다. 미래 지구 리더십은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과 더불어 비전통, 신흥 안보의 초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구 거버넌스 운용 능력, 그리고 비서구, 3세계의 근본적 탈식민 문제 해결을 위한 진화된 리더십으로 규정될 것이다.

〈표 2〉 미국 내 대중 전략의 담론 지형

	중국 부상 좌절	현실적 공존	전략 협력
핵심 내용	21세기 초 부시행정부 네오콘의 대중 견제전략에 이어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전면 압박 전략	중국의 부상을 인정한 상태에서 중국 정권의 성격에 불개입, 중국과 현실적 타협, 협력과 경쟁의 공존 주장	중국에 대한 기존의 관여 전략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판단, 지속적인 대중 관여가 미중 협력을 보장할 것이라는 주장
주창 그룹	네오콘, 트럼프 정부 주요 인사	현실주의, 경제부문	자유주의
정책 내용	대중 무역, 기술 분쟁 심화, 금융, 에너지 부문으로 확대, 대중 군사력 증강 및 상쇄/다영역 작전 현실화	미국의 동맹 강화, 무역, 기술 분야에서 현실적 타협, 미국 주도 질서의 현실적 기반 강화, 지구적 문제에서 협력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재강화, WTO 등 국제기구 활성화, 동맹 강화, 중국에 대한 지속적 협력 및 관여, 인권외교 강화

한편 시진핑 정부는 이전 어느 정부보다도 다양한 외교 비전, 담론, 전략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면서 ‘중국의 꿈(中國夢)’을 기치로 ‘강국화(強起來)’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표 3 참고). 시진핑 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공산당 체제의 안정 및 시진핑 권력 강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해 중국이 부상하는 일정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중국의 부상을 향한 국민적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2035년, 2049년으로 나아가는 중국 부상 일정의 완성은 시진핑 체제는 물론이고 공산당 일당 체제의 운명과도 직결된 과제이다.

시진핑 정부 하의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 일대일로 전략 역시 미래 리더십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외교 담론, 비전, 전략은 여전히 ‘중국 부상’이라는 협소한 국익 추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 중국의 대미 전략

주요 대전략	미국과의 패권 경쟁 우회 전략과 주변국 견인 전략
중장기 핵심 전략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 일대일로 구상

정책 내용	<p>지구적 차원에서는 성급한 이익구조의 재분이나 영향력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도전을 적극 회피.</p> <p>지역차원에서는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지만 온건한 방식으로 전개. 전략적 강제수단의 사용은 핵심이익 문제로 국한할 것을 논의.</p> <p>2035년까지는 가능한 패권 추구 의지를 공식화하지는 않는 전략.</p> <p>미국과의 갈등도 불가피하지만 불필요하게 확장하지 않으면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p>
-------	---

탈트럼프, 탈시진핑 시대를 대비하는 미중 관계의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지구 거버넌스 전체에 미치는 비용과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미중 협력은 양국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며, 다른 국가들의 적극적 비판과 참여가 요구된다.

미중경쟁으로 지구적 비용과 피해를 방지하려면 미중 간 대전략적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타협이 전제로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거버넌스는 지구와 지역 차원에서 다차원적, 다자적, 복합적 거버넌스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 분야의 협력이 가능한데, 우선 경쟁성이 약하고 상호 이익이 중요한 분야,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초기 노력의 발판으로 상정할 수 있다.

〈표 4〉 향후 세계질서 및 미중 관계 시나리오

전략 갈등 심화 및 충돌	협력과 경쟁의 공존	새로운 차원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럼프 정부의 무역, 기술 분쟁의 지속, 금융, 에너지 분야로 확대</li> <li>·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대일로구상 간 충돌로 유라시아의 배타적 양대진영 분리</li> <li>· 미중 경제의 decoupling 및 세계 공급사슬의 재편</li> <li>· 민족주의 및 역세계화의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중국 영향권 인정</li> <li>· 중국 정권에 대한 비판 자제, 개방적 자유주의 질서 유지 (openness-based order)</li> <li>· 규칙에 기반한 경쟁 지속</li> <li>· 민족주의 및 자국 우선주의의 절제</li> <li>· 세계화의 속도 조절 및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강대국 협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중 경쟁의 충돌요인 선제적 인식</li> <li>· 사회경제부문의 요구 적극 반영</li> <li>· 지구적 공통 문제(질병, 테러, 난민, 환경, 인권 등) 인식 심화 및 미중 간 공동대처 필요성 강화</li> <li>· 중견국 역할 확대</li> </ul>

미중 간 에너지 부문 상호 관계는 〈표 5〉의 시나리오 중 현상유지 또는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미중은 현재의 전략 경쟁 구도에서 에너지 협력 의사가 매우 적은 한편, 그대로 갈 경우 현상 유지 및 디커플링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에너지 경쟁은 자체 부문의 성격보다 다른 부문, 혹은 대전략과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미중 양국의 전략 경쟁/협력 의사와 직접 연결될 것이다.

에너지 부문에 대한 경쟁/협력은 미중 대전략 경쟁/협력과 궤를 같이할 것이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지속되면 에너지는 지경학적 경쟁 물자의 성격을 갖게 되고 결국 상호 분리 현상이 강화되거나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에너지 상호의존의 무기화 현상이 출현할 것이다. 만약 중국의

추격에 대한 미국의 본격적인 선제 대응이 더욱 강화되면 무역, 기술, 금융, 아키텍처 경쟁에 이어 에너지 부문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의 동맹국 연대 강화, 러시아, 이란 등 중국과 협력 국가에 대한 외교적 압박/회유, 더 나아가 수송로 봉쇄 등 군사적 대응 발생으로 미중 교란 요인은 극대화될 것이다. 특히 에너지 부문의 충돌은 본격적인 남중국해 및 중동, 파나마 운하, 북극 등을 둘러싼 지구적 군사 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표 5〉 에너지 부문 미중 관계 미래 시나리오 및 반향

현상유지/디커플링	에너지 대란	에너지 기반 미중 전략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에너지 수입다변화 전략 및 안정대책으로 대미 의존도 최소화</li> <li>· 에너지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중국의 에너지난 해소 강화</li> <li>· 중러 간 전략 협력 강화의 여파로 에너지 협력 강화</li> <li>·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지속적 성공</li> <li>· 미국의 중국 에너지안보 교란 정책 실패</li> <li>· 중국의 말라카 해협 우회전략 성공 및 메콩 유역 개발 우위 선점</li> <li>· 중국-이란 관계 강화 유지 및 푸틴/ 혹은 푸틴 이후 중러 전략 협력 유지</li> <li>· 미중 간 에너지 디커플링 및 소강상태의 현상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중 간 무역, 기술 분쟁 심화</li> <li>· 미중 간 전략 경쟁에 대한 인식 갈등 심화 및 세계질서의 전반적 악화</li> <li>· 에너지 부분 미국의 대중 교란 정책 본격화</li> <li>· 세계적 에너지 감산 및 가격 증가 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부담 증가</li> <li>· 러시아, 이란과 관계 개선 혹은 압박으로 중국의 에너지 수입원 공격</li> <li>· 에너지 수송로에 대한 군사적 봉쇄, 미국 동맹국 협력 강화로 미중 군사 갈등으로 발전</li> <li>· 말라카해협, 호르무즈, 메콩유역, 파나마 해협 등 주요 에너지 수송로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압박 성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세계질서 악화에 대한 공동인식 증가</li> <li>· 미중 간 제한된, 혹은 전면적 전략 협력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 증가</li> <li>· 중견국 및 국제사회의 미중 전략불신 감소 요구 증가</li> <li>· 에너지 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미중의 공통 인식</li> <li>· 미중 간 에너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 증진 정책 시동</li> <li>· 전략적 재보증과 협력 분야 확대 전략</li> <li>· 유라시아 아키텍처의 협력적 진화 및 지역적, 지구적 협력 거버넌스 확대</li> </ul>

중국의 추격 속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은 군사와 무역, 금융, 투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표 6 참고).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수송로를 봉쇄하고 수출국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수송로 봉쇄의 경우 석유 및 가스 수입의 80%가 통과하는 해상수송로인 말라카 해협을 동맹국과 함께 봉쇄할 수 있다.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경제 및 금융 제재 이후 대중 수출량이 줄어든 사례와 2019년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로 중국의 이란 석유 수입이 52.9% 급락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수출국 제재 또한 대중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무역을 통한 압박은 자국은 물론 동맹국들과 함께 석유, 가스는 물론 석유제품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정해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다. 미중 무역전쟁 기간 중 중국산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여 수입을 억제할 바 있다.

금융의 영역에서는 유전 개발 및 정제 시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중국과 산유국 간 협력을 제한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은 일본과 함께 브루나이의 석유정제시설 프로젝트에 투자를 지원한 바 있다. 달러화 결제에서 위안화 결제로 변경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미국은 산유국의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가격 변동에도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투자를 통한 압박은 미국은 물론 동맹국에서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 활동을 금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어하는 것이다. 2005년 미국은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유노컬(Unocal) 인수합병을 금지시킨 바 있다.

〈표 6〉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

분야	방법	사례
군사	수송로 봉쇄, 수출국 제재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제재 후 수출량 감소
무역	수출 통제	중국산 석유제품 관세 인상
금융	자금지원 금지, 위안화 결제 금지	브루나이 석유정제시설 프로젝트의 위안화 결제 변경금지
투자	인수합병 반대, 협력사업 금지	중국해양석유총공사-유노컬 인수합병 금지

위와 같은 대중 압박 전략에 대한 중국의 회피 전략은 다음과 같다(표 7 참고). 먼저 중국은 군사적으로 미국과 협력하지 않는 러시아로부터 육상 파이프라인은 물론 해상 선박을 위해 북극항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2015년 이란-파키스탄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무역을 통한 회피 전략으로는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석유 가스 수출기업에 타격을 입히는 방법이 있다. 무역전쟁 중 LNG에 대해서는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지만, 석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금융 분야에서의 회피 전략은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기 위해 석유 및 가스 거래 시 가격 변동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는 2019년 4월 중국 석유와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가 러시아의 노바텍(Novatek)이 추진하는 '북극 LNG2 (Arctic LNG2)'프로젝트 지분을 각각 10%씩 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앙골라와 미얀마 등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은 물론 AIIB가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표 7〉 중국의 대미 압박 회피 전략

분야	방법	사례
군사	우회 수송로 확보, 수입선 다변화	북극항로, 이란-파키스탄 파이프라인
무역	보복관세 부과	미중 무역전쟁
금융	위안화 결제 확대, 투자프로젝트 자금조달	위안화 국제화
투자	인수합병, 공동개발프로젝트	앙골라, 미얀마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간 대전략적 상호 협력 필요성 인식과 전략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에너지 부문의 갈등/협력은 파급효과가 무역, 기술 분야보다 월등히 크고 직접적이다. 에너지 분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지구적으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의 확산 효과가 지리적 특수성을 지니고, 부문별로 확장성이 존재한다. 반면 에너지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경우처럼 전략물자이므로 협력의 경우 신뢰구축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문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35년경까지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정학적 상호 반성과 타협의 가능성이 증대될 경우 에너지 부문의 협력으로 미중 협력을 가속할 수 있다. 에너지 부문의 협력은 비단 지정학적 협력의 추동력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미중 양국의 경제적 효과, 경제, 사적 부문의 구체적 이익과 지지, 그리고 동맹국과 산유국들의 지원과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조 및 준비가 중요하다.

향후 미래의 국제정치는 문제의 복잡성과 세력 확산(power diffusion) 등의 변화로 인해 개별 강대국들의 리더십이나 소수 강대국 간의 공동통치(condominium) 또는 바이게모니(bigemony, 2국 지배) 등으로 국제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탈근대 이행이라는 조직 원리 변화의 현실에서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넘어서는 협력적 지구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를 누가 주도하는가의 경쟁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트럼프 정부나 시진핑 정부의 리더십 모델은 상당히 많은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중 간 협력의 계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은 여전히 지정학적 주요 경쟁, 핵확산과 안보, 초국가적 범죄와 기후 변화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보안, 우주 공간 거버넌스, 연구개발, 인공지능, 새로운 분야의 규칙 개발 등 몇 가지 신흥 분야에서 조정과 협동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향후 인간안보를 둘러싼 전략소통의 통로를 유지하며 전략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국 대선 등 정치적으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무역협정을 유지하면서 전염병 피해를 입은 경제를 되살리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조율을 심화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

## IV.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의 갈등과 협력

### 1. 미중 무역 관계가 에너지 협력에 미치는 영향

미중 무역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무역전쟁 국면을 넘어 갈등과 제한적 타협의 패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2008년 지구금융위기 이래 상대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있으며 공급 사슬의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고 있다. 2018년 무역 전쟁은 이런 추세를 가속하여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는 도출되었으나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를 되돌리기보다는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중 양국의 경제 상호의존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무역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무역 불균형의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미중 무역 관계에서 갈등의 수위가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미중 양국이 상호의존의 수준을 낮추고 디커플링의 방향으로 간다면 양국 간 무역 갈등의 수위가 조절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안보관계 악화에 대한 경제의 저지, 완충 역할은 현저히 하락하게 된다. 미중 무역관계의 안정화는 안보 요인이 더욱 부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미중 에너지 관계가 안보/전략적 요인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미중 무역관계와 에너지 무역은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있다.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에서 나타나듯이, 에너지 무역(중국의 미국의 셰일가스 수입)은 미중 무역 관계를 개선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국 무역 관계의 개선이 다시 에너지 무역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에너지 무역은 무역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또한 미국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 공급 계약의 체결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미중 에너지 무역의 확대는 중장기적으로도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무역의 확대는 미중 간 협력의 경험을 축적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에너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미중 무역협상의 1차 합의 이행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약속 이행을 위해 미국산 석유와 LNG 구입을 재개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침체로 에너지 소비가 급감하면서 수입 수요도 급감하였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협상에 실패한 이후 생산량을 경쟁적으로 확대한 이후 유가 폭락으로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의 경영악화가 부각되면서 미국의 수입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수입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비보다는 전략비축유의 확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수출 중단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수준 이상(2018년 기준 전체 수입량의 약 3%)으로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미중 양국 관계에는 ‘무역-안보 넥서스’가 작동하므로, 에너지 무역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에너지 수입 확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지만 중국은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이 약속한 미국 에너지 수입 규모가 중국 전체 에너지 수입의 7-10%에 달한다고 볼 때, 그만큼의 물량을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미중 양국의 무역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에너지 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요컨대, 미중 무역 관계는 장기적 갈등과 조정 국면을 거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양국 간 에너지 무역의 확대와 협력을 촉진할 만한 동력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양국 무역관계의 진화는 지정학적 요소의 개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

## 2. 중국의 에너지 기술 혁신이 미중 에너지 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 에너지 분야에 있어 다변화 외교와 기술혁신으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중국의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는 GDP의 0.08%를 차지하여 다른 OECD 국가 평균 0.04보다 훨씬 높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에너지 우위(Energy Dominance)를 내세우면서 셰일유 및 가스나 전력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에너지 관련 투자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에너지 효율성, 석유, 석탄 부문에 고르게 나누어져 있다. 중국의 에너지 기술혁신은 기술 진입 장벽이 낮으며 상업화로 직접 이어지는 태양광, 풍력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드러내왔다. 특히 중국은 수출시장에서 정부보조금, 태양광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적합한 인프라, 그리고 해외 장비나 기술 인력 도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으로 인해 태양광 모듈 생산가격을 급속하게 낮출 수 있었고 시장 확대에 기여하였다. 중국기업들은 초기 수입 부품을 조립하는 태양전지와 모듈 부문에 진입하였고 시장 확대 및 기술축적이 진행되면서 점차 기술 난이도가 높은 폴리실리콘 부문 등으로 확장하여 현재 태양광산업 전체 밸류체인에서 성공적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태양광과 풍력이 세계 총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이고 향후 에너지의 전력화를 주도하면서(보수적인 예측의 경우에도) 2040년 전력의 50% 이상을 공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이후 세계 총 에너지 수요에서 석유에 이은 제2의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태양광과 풍력이 세계 총 에너지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 내외로 낮다. 중국의 경우, 비화석 연료의 비중은 2018년 18% 정도이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으로 2030년 이후에는 에너지 수요 증가분을 신재생에너지와 수력 등 청정에너지로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세계 에너지원별 에너지 소비 전망(1,000조 Btu)



\* 출처: IEA (2019)

따라서 기존의 에너지원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이 14차 5개년 계획(FYP)에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신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이 원전의 균등화발전비용과 같아지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문제 확대 해결이 요구된다. 신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 기술 비용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자금 조달, 그리드 통합과 같은 비기술적 비용은 여전히 많이 들기 때문에 신생에너지의 그리드 패리티에 새로운 장애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나 멀티 에너지 보완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도 미국의 중국 견제가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협력은 양국 국교수립 이후 시작되었고, 특히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미-중 청정에너지 연구센터(CERC, Clean Energy Research Center)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모든 협력이 단절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에너지 분야의 전선은 태양광에서 풍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풍력 터빈의 생산 비용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함에 따라 일부 분야에서 풍력 발전 설비 설치 비용이 화석 연료 발전 설비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재생 에너지 장비의 지구적 가치 사슬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2010년에서 2018년의 기간 중 풍력 발전의 생산 비용은 약 35% 감소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무역 전쟁으로 인해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Hook 2019). 풍력 에너지 발전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기타 소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였을 뿐 아니라, EU도 중국산 철강에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풍력 발전 비용이 약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Dryholm 2019).

결론적으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중국에게 대단히 유망한 분야이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0년 이후 국내 에너지 소비 증가분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30년까지는 기술혁신의 한계, 미국의 견제에 따른 공급 사슬의 재편이란 도전 요인으로 인해 획기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V. 미중 갈등의 심화와 협력의 가능성, 유럽의 교훈

### 1. 중국의 부상 좌절을 겨냥한 미국의 선제적 전략과 에너지 부문의 위기

미중 간 패권 장악을 위한 경쟁에서 양국의 세력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 가운데 미국의 선제적 공세 정책은 에너지 부문에서 이어질 확률이 크다. 미중 간 국력 격차가 줄어들어 결국 종합 국력의 순위 역전이 확실할 경우, 미국 입장에서 국력 격차가 가장 큰 시점, 그리고 중국의 취약성이 가장 큰 분야에서 선제적 공격전략을 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선택일 것이다.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 및 군사력 증강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50년경에 이르면 군사력을 포함한 종합 국력의 역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에너지 부문은 수급의 시장논리 상 중국의 자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중국의 에너지 자립과 1인당 GDP의 상승 과정에서 불균형한 에너지 수급 취약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1인당 GDP 1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에 이르는 과정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이에 대한 공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중국의 취약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략 2030년 전후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 미중 간 종합 국력 격차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에너지 부문에서 미국의 선제 공세가 이루어진다는 전망이 가장 합리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 전략은 2018년부터 이미 군사부문의 대중 압박 전략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2018년 5월 태평양 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편되었고, 2019년 6월 1일

미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안보전략을 정식으로 제시하였다. 2014년부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대비책으로 3차 상쇄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군사전략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미육군 중심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in)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은 2028년까지 중국의 미국 밀어내기 군사전략, 즉 반접근/지역거부(A2AD)전략을 상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군사전략을 완성하고 아시아에 군사기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은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수송로 압박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미국은 미중 양자관계에서 군사력을 사용하여 중국의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말라카 해협, 호르무즈 해협, 파나마 해협에 대한 군사적 압박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그림 8 참조). 이러한 군사전략으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가능성이 존재하며, 미국은 2020년대 말까지 중국을 압도할 전면적 군사전략을 갖추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대중 압박 전략은 에너지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부추겨 중국에 대한 부담 증강 전략, 그리고 이란, 러시아 등을 압박 또는 회유하여 중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 제한 전략으로 구체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제, 외교전략은 다른 국가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대중 압박 전략의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대중 에너지 압박은 자국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 기술 분쟁에서 원하는 양보를 얻기 위한 목적, 남중국해 등 지정학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 그리하여 중국의 부상과 패권 도전을 봉쇄하기 위한 장기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에너지 부문 압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수송로 봉쇄 등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경우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고, 동맹국들의 실질적 도움을 얻기 위해 사전 외교적 지지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 에너지 압박은 단순히 에너지 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시아, 더 나아가 중동과 남미를 포함한 세계 각 지역에서 안보 현상유지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진다.

〈그림 8〉 중국에 대한 수송로 압박 전략 가능 지역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 작성

에너지 부문의 대중 압박 전략은 미국의 대중 군사전략 전반과 연결되어 상당한 지역적 반향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의 수송로 봉쇄는 중국의 군사적 반발을 불러올 것이며, 중국은 미국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군사 공격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남중국해, 대만해협, 그리고 중동으로부터의 수송로에서 미중 간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미국의 인태 군사전략은 이러한 에너지 부문 압박 전략에 대한 치밀하고 단계적이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구상될 수 있다.

미국의 대중 에너지 압박으로 발생할 파급효과는 특히 아시아 주요국들의 군사 안보와 경제력 유지와 직결된 문제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경우 에너지 수요의 압도적 부문을 중동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송로 안전에 변화가 생길 경우 커다란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말라카 해협에 인접한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 역시 지역 안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이 대중 전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시아 차원의 압박 정책은 다른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국가의 의견 개진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미국이 대중 에너지 압박에 성공하여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양보를 얻어낸다고 할지라도 이는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 군사력 사용 압박이 미중 간 충돌로 이어질 경우, 이는 단기적 고강도 분쟁이 되거나 혹은 중장기적 저강도 분쟁이 될 확률이 높다. 단기적 고강도 분쟁에서는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의 승리가 확실시된다. 그러나 중국은 단기적 패배에 이어 다시 미국에 도전할 의도를 회복할 것이다.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 미중 간 대립 부문 확대, 중국 내 공격적 민족주의 발흥, 미중 간 전면적 군사 충돌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수송로 봉쇄 등 중장기에 걸친 저강도 분쟁은 아시아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를 분열시키고, 중동 원유 수출국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국의 대중 전략에도 반드시 이익이 되지 않는다.

향후 아시아 국가들, 더 나아가 원유 수송로 연선 국가들은 미국의 대중 군사 압박, 외교적, 경제적 압박이 자국에 미칠 영향력을 예의주시하여 미중 에너지 충돌 전에 이를 막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다. 무역, 기술 분야의 미중 양자 분쟁과 달리 에너지 부문 미중 갈등은 지역적, 지구적 공공재를 상대로 한 강대국 경쟁이므로 사활적 이익이 걸린 다른 국가들이 존재한다. 이들 국가는 미중의 경쟁을 예의주시하면서 미중 양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안정적이고 타협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추동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중 압박, 그리고 중국의 대미 반격은 모두 아시아, 중동, 남미 국가들의 지지와 도움을 필요하므로 이를 발판으로 에너지 충돌 이전에 미중 양자 구도에 개입할 수 있는 협력적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

## 2.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성립 역사가 동아시아에 주는 함의



에너지와 전략 물자 부문을 기반으로 범국가적 지역 협력으로 나아간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 더 나아가 유럽원자력공동체(유라툼, EURATOM)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 6개 회원국은 1957년에 공동체의 범위를 경제 전반으로 확장하는 로마조약(Treaty of Rome)을 체결하고 1958년에 발효하여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를 출범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이며 기본적으로 역내에서는 생산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면서,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공동의 무역정책을 통하여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제통합체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전략 물자 부문의 협력을 통해 미중 간 전략 경쟁을 완화하고 아시아 국가들 모두에게 유익한 지역 질서, 지역주의, 지역 통합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ECSC의 경우를 보면 냉전 초기 미국 외교의 대전략 방향과 이에 따른 서독,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승전국으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패권국으로서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와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소련과 공산권이라는 공동의 적과 싸우기 위해 서독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필요성 하에 마셜플랜, 나토 등을 통해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서독을 관여정책으로 포용하고자 했다. ECSC는 이러한 전략적 목적 하에서 전략물자인 철강과 석탄의 유럽 차원의 생산 및 관리를 통해 서독을 지역주의에 편입시키고, 유럽 국가 간 경제 통합과 전략 통합의 경로를 마련하였다.

ECSC 형성 당시 구도를 현재의 미중 경쟁구도와 비교해 보면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ECSC가 패전국 서독에 대해 정치적 우위를 점한 승전국들과 상승하는 패권국의 개입이었다면, 현재의 미중 관계는 이와 다르다. 미국은 경제적 상호관계에서 규칙 기반 질서를 중시하며 중국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정책을 펴갈 경우 중국의 협력적 부상 과정에 관여하고 아시아 다자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미중 양국 중심의 양대진영으로 점차 분리,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자국 중심의 다자주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일대일로 대 인도-태평양의 지역구상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미단극체제기의 다차원적, 상호보완적 다자주의 아키텍처가 심각히 훼손되고 강대국 중심주의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극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 에너지를 축으로 한 전략 협력이 가능한지는 지정학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ECSC 형성 당시 프랑스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 있어 ECSC 형성은 자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독일의 재흥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ECSC는 정책 결정자들의 외교적 비전과 역량의 산물이며 초국가주의 원칙에 근거한 다자주의 전략으로 전략물자이자 경제물자인 석탄과 철강을 유럽 차원에서 공동 관리하려는 실현 가능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한 정책 능력의 결정체이다. 한국도 프랑스처럼 부상하는 중국을 기존 질서에 건설적으로 편입시키고 중국의 부상을 독려하면서도 다자 질서 속에서 중국의 부상에 관여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프랑스가 서독의 석탄과 철강 생산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전쟁 발발, 승전국으로서 프랑스의 입지, 프랑스와 서독의 크지 않은 국력 격차 때문에 가능하였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힘과 외교력을 독자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다자주의 제도를 통해 다차원적 관여라는 중견국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구하려면 미국의 적극적 역할과 지원이 절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긴밀히 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공동 관여, 지역주의에 대한 공동 비전, 정책 수단 축적 등이 중요하다. 현재는 오히려 일본이 더 주도적인 입장이다. 한국이 역사문제 등 한일 갈등 해결과 더불어 일본, 호주 등 다른 중견국들과 공동으로 주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관건은 향후 미국이 인태지역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이다. 미국은 유럽연합처럼 역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의 촉진자로서만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에너지 중심의 인태 전략이 한일 및 동남아 국가와 협력을 견인해 역내 에너지 협력을 달성하고, 중국도 에너지 협력망의 참여자가 된다면 미중 관계가 적대적이 아닌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영문자료〉

- 1 차자료 -

BP. 2019a. Energy Outlook 2019.

BP. 2019b. "Global GDP Growth and Regional Contributions." Energy Outlook Downloads and Archive.

BP. 2019c. "Contributions to Primary Energy Demand Growth." Energy Outlook Downloads and Archive.

EIA. 2019.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9 with projections to 2050." <https://www.eia.gov/outlooks/ieo/pdf/ieo2019.pdf>

Enerdata. 2020. "Natural gas production." <https://yearbook.enerdata.net/natural-gas/world-natural-gas-production-statistics.html>

EU Directorate-General for Energy. 2019. "Quarterly Reports on European Gas Market," Unit A.4, Market Observatory for Energy. [https://ec.europa.eu/energy/sites/ener/files/quarterly\\_report\\_on\\_european\\_gas\\_markets\\_q3\\_2019.pdf](https://ec.europa.eu/energy/sites/ener/files/quarterly_report_on_european_gas_markets_q3_2019.pdf)

European Commission, "Fourth report on the State of the Energy Union." [https://ec.europa.eu/commission/sites/beta-political/files/fourth-report-state-of-energy-union-april2019\\_en\\_0.pdf](https://ec.europa.eu/commission/sites/beta-political/files/fourth-report-state-of-energy-union-april2019_en_0.pdf)

IEA. 2019. "Energy Transitions Indicators." <https://www.iea.org/articles/energy-transitions-indicators>

IEA. 2019. World Energy Outlook 2019.

The Department of Defence. 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2019.6.1.)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

## - 2 차자료 -

- Dryholm, Morten. 2019. "US-China trade war and climate of protectionism are holding back needed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24.
- Hook, Leslie. 2019. "Trade War Fears Ripple Through Wind Energy Industry's Supply Chain." *Financial Times*. October 22.
- Liu, Feng, and Ruonan Liu. 2019. "China, the United States, and order transition in East Asia: An economy-security Nexus approach." *The Pacific Review*, pp. 1-24.
- Liu, Feng. 2020.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East Asian Security." Report of Strategic Studies in China (2018)." Springer, Singapore, pp. 71-84.
- Zeihan, Peter. 2016. *The Absent Superpower: The Shale Revolution and a World Without America*. Zeihan on Geopolitics.
- Zeihan, Peter. 2014. *The Accidental Super Power: The Next Generation of American Preeminence and the Coming Global Disorder*. Twelve Tables.

## 〈중문 자료〉

## - 1 차자료 -

-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国家能源局. 2017. "推动丝绸之路经济带和 21 世纪海上丝绸之路能源合作愿景与行动." 国家能源局网站 [http://www.nea.gov.cn/2017-05/12/c\\_136277473.htm](http://www.nea.gov.cn/2017-05/12/c_136277473.htm).
- 习近平. 2014. "积极推动我国能源生产和消费革命." 新华网.
- 习近平. 2015. "迈向命运共同体开创亚洲新未来—在博鳌亚洲论坛 2015 年年会上的主旨演讲 (2015 年 3 月 28 日, 海南博鳌)." [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249640.shtml](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249640.shtml)
- 习近平. 2015. "推动全球治理体制更加公正更加合理."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5-10/13/c\\_1116812159.htm](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5-10/13/c_1116812159.htm)
- 杨洁篪. 2015. "共建 21 世纪海上丝绸之路分论坛暨中国东盟海洋合作年启动仪式" (2015/03/29) [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249710.shtml](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249710.shtml)
- 電力規劃設計總院. 2019. 『中國能源發展報告 2018』.
- 中国外门出版发行事业局. 2019. 『中国关键词, key words to understand china』. 北京:新世界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新聞辦公室. 2011. 『2010 年中國國防白書』.
- 中華人民共和國國防部. 『国防白皮书:中国武装力量的多样化运用(2013-04-16)』 [http://www.mod.gov.cn/affair/2013-04/16/content\\_4442839\\_4.htm](http://www.mod.gov.cn/affair/2013-04/16/content_4442839_4.htm)
- 中華人民共和國國防部. 『新时代的中国国防』白皮书. 2019. [http://www.mod.gov.cn/regulatory/2019-07/24/content\\_4846424.htm](http://www.mod.gov.cn/regulatory/2019-07/24/content_4846424.htm)
- 胡錦濤在中國共產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堅定不移沿著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為全面建成小康社會而奮鬥." [http://news.xinhuanet.com/18cpnc/2012-11/17/c\\_113711665.htm](http://news.xinhuanet.com/18cpnc/2012-11/17/c_113711665.htm)

## 〈국문 자료〉

## - 1 차자료 -

한국가스공사. 2017. "제 2 차 가스혁명이 불러올 글로벌 LNG 시장 변화."  
 한국가스공사블로그. 한국무역협회. 2020. "미중 1 단계 무역합의 평가." 『통상이슈브리프』.  
 에너지 경제연구원. 201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 - 2 차자료 -

김승렬. 2002.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통합정책 -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중심으로(1945-1951)." 『사총』 55: 353-388.  
 김승렬. 2002.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생산의 연대'? : 프랑스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계획(슈만플랜)의 기원과 의미(1945-1950)" 『프랑스사 연구』 6:29-57.  
 김유정. 2013. "장 모네(Jean Monnet)의 지식인 네트워크와 유럽통합." 『유럽연구』 31-2: 239-262.  
 이동률. 2017.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제 57 권 제 2 호, pp.369-403.  
 피터 자이한. 2019. 『세일 혁명과 미국없는 세계.』 홍지수 역. 서울: 김앤김복스.

## ■ 담당 및 편집: 서주원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6) jwseo@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0년 6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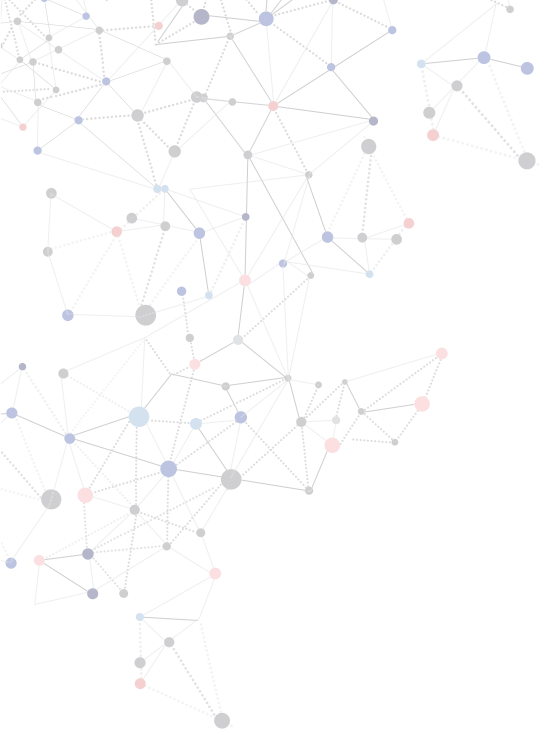
[EAI 스페셜리포트] 아·태 에너지 협력 구상: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아·태 지역의 미래

979-11-90315-82-1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





| 후원 |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 중구 을지로 158, 909호(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www.eai.or.kr eai@eai.or.kr